

劉 막다른 골목서 고민... 자진 사퇴 가능성

與 최고위 거취 결론 못내

비박계는 집단행동 검토

새누리당은 29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의를 소집,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고위원 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의원총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잘 결정했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의원총회 전에 자진 사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김 대표는 "최고위원들이 각자 많은 얘기를 한 것을 유 원내대표가 잘 경청했고 고민을 하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끝냈다"며 "이 문제를 최고위에서 끝낼 일인지 의원총회에서 끝낼 일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최고위원들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하고, 그 책임은 유 원내대표가 지는 것이 좋다. 당을 위해서 희생을 통한 결단을 부탁한다는 간곡한 얘기가 있었다"며 "또 몇 분은 그래도 시간을 좀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이 이상의 발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브리핑을 끝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한)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의가 아니라 의총에서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물론이다"고 답했다.

지도부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들 간에도 세 싸움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분은 확산할 조짐이다.

이날에는 최근 친박(친박근혜)계의 유 원내대표 사퇴 압박 움직임에 반발, 비박



“고민스럽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박근혜)계가 집단행동에 들어가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박계 재선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김용태 의원의 주선으로 긴급회의를 갖고 유 원내대표의 입지가 더 흔들리도록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회동 직후 성명을 통해 "원내대표는 당헌에 따라 의총을 통해 선출됐고, 최근 당·청 갈등 해소에 대한 약속도 있었다"며 "이런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것을 의원들의 총의를 묻지 않은 채 최고위원회의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유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친박계를 겨냥, "의총 결과를 무

색하게 하면서 원내대표 사퇴를 주장해 당 내 분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부 비박계 의원은 개인적으로 '유승민 구하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비박계 3선 중진인 정두언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면서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 원내대표를 쫓아내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와의 관계를 고려해 물러나라고 여당 원내대표를 흔드는 것은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청 관계를 부정하려는 시도

로 보일 수 있다"면서 "유 원내대표를 그냥 일방적으로 끌어내리는 모습은 국민에게도 우리 당이 할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른 비박계 중진들도 이날 직·간접 접촉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친박계 최고위원들의 공세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당장 전면에서 나서지는 않겠지만 하루 이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친박계의 행보가 도가 지나치다는 판단이 들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는 전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국회의원 오늘 국회서 KTX 관련 대책회의

광주·전남·북지역 국회의원들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호남선 고속철(KTX)과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갖는다. 의원들은 이날 긴급대책에서 ▲호남선 KTX 증편 ▲호남선 KTX 역사인프라 보완 ▲호남선 KTX 2단계 공사

등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날 긴급대책에는 광주·전남·북지역 국회의원 외에도 유일호 국토부 장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 정부 입장을 전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朴대통령, 靑 수석비서관회의 주제

“경제 정상성장 궤도로 복귀 위해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를 정상성장 궤도로 하루빨리 복귀시키고 소비를 비롯해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가 연초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극심한 가뭄 피해가 겹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회복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리도 내렸지만 이제 또 과감한 재정정책이 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금리는 금리대로 내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단의 경제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만 안 결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문제나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공을 국회와 새누리당으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거부권 정국’... 국회 상임위 ‘파행’

복지위, 메르스 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법안 심의

법사위,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 내달 6일 청문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파로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는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기획재정부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다른 상임위도 각종 법안 심사와 지난해 결산 심사를 위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위의 경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대책 차원에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심의했다.

법사위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계획서를 채택하고 인사청문회를 7월 6일 오전 10시 실시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결과보고서 청문회를 마친 당일 채택할 계획이다.

정의회 국회의장은 재의 일정 협의를 위해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의 3차 회동에 나섰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거센 사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의장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7일까지 여당을 설득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이미 재의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분간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 의사일정 및 여야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국민 안전 및 민생 차원에서 메르스 관련 대책은 협조하기로 했으며, 절차상 시기가 정해져있는 인사청문회 등 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만 정상적으로 개최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만 정상적으로 개최됐다.

국회법 재의 여부 주목받는 정의화 국회의장

‘6월국회’ 시한 내달 7일까지 여야 합의 불발엔 직권상정 입장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동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개정안 상정 ‘데드라인’을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7일로 정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장의 직권상정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끝내 불참할 경우,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 폐기’된다.

야당은 7월 1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 의장

은 ‘선(先)여야 합의’ 원칙을 내세우며 여야 원내지도부에 의사일정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와 의회 회동에서 “국회법을 보면 여야 원내대표의 협력이 이뤄지지 않을 때 의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에 부치는 일은) 7월 7일을 넘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 의장은 29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일정을 포함해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정 의장은 29일 자정까지 국회법 개정안 재의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해 달라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후 통첩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나 6월 임시국회 종료 직전인 6~7일 재의의 요구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서는 정의화 의장이 직권 상정에 나서더라도 여당의 불참으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5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

1.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5. 6. 8(월) ~ 19(금)
- ② 전형일 : 2015. 6. 22(월) 오전 10:00
- ③ 합격자 발표 : 2015. 6. 24(수) 오전 10:00
- ④ 등록기간 : 2015. 6. 24(수) ~ 26(금)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음악학과(M.A.)

2.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00
		신학연구학과(M.A.T.)	00
		유아교육학과(M.Ed.)	00
		음악학과(M.A.)	00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0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원학과(M.A.)	00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학지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 / 개인회생·파산
이혼·재산분할·위자료 / 상속

상담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신한카드,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